

과학기술계 ‘결집’해야 할 때다

글 | 민경찬 _ 과실연 상임대표/연세대학교 대학원장 kmin@yonsei.ac.kr

지난 4월 21일은 예년과는 다른 느낌의 ‘과학의 날’이었다. 41년 전인 1967년 ‘과학기술처’ 간판을 단 것을 축하하던 기념일이었는데, 올해는 과학기술부가 폐지되고 ‘교육과학기술부’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맞이한 것이다. 이 때문인지 과학기술인은 별로 신이 나지 않았던 날이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과학기술계의 많은 우려들이 실제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선과정에서 원래 기획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 구도는 과학기술부에 교육인적자원부의 고등교육 인력양성 부분을 포함시키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초·중등교육은 지역교육청으로, 대입정책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으로 넘겨 자율화하는 것이라고 알려졌었다. 그러나 대통령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는 그 반대로 과학기술부를 해체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기초과학 부문을 포함시키고, 기술부문은 지식경제부로 넘기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과학과 기술의 분리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고, ‘과학기술’에 대한 새 정부의 근본적인 인식에 대부분의 과학기술인들이 크게 반발하기도 하였다.

교육현안에 묻힌 ‘경제 살리기의 근간’

새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이 잘 안 보인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가 ‘경제살리기’와 ‘실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경제살리기’의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은 국정운영에서 잘 안 보인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후 교육과학기술부의 첫 번째 대통령

업무 보고가 지난 3월 20일 대전 대덕의 원자력연구소에서 있었다. 첫 보고 장소를 연구기관으로 선택한 것은 과학기술계에 대해 배려 차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후 언론은 주로 ‘영어교육’, ‘사교육비’, ‘대입 수능’ 이야기를 다루었다. 실제로 교육과학기술부 내의 업무에서 주요 어젠다의 70~80%는 교육현안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언론보도를 보면 일반적으로 장기적 과제인 ‘과학기술’은 국민들에게 더 현실적인 ‘교육 문제’에 묻혀버리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업무내용뿐만이 아니다. 새 정부의 각료나 청와대의 수석인선에서 과학기술인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지난 4월 9일 치른 총선에서도 각 정당은 과학기술자들을 거의 공천도 하지 않아 18대 국회에서는 과학기술 전문성을 지닌 국회의원을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각 분야 전문가들을 발탁하기 위해 마련한 비례대표는 돈과 친분에 의해 결정되어 과학기술계를 대표한 비례대표는 단 한 명도 당선자 리스트에 오르지 못했다. 과학기술계는 그 동안 총선의 공천과정에서부터 과학기술계 인사를 일정 부분 참여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이다.

지난 40여 년 동안 과학기술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연구에 전념하여왔다. 그 결과로 아직 ‘국가 브랜드 가치’가 20~30위권에 있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세계 6~7위권으로 올려놓았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데 뒷받침을 해온 것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인들은 ‘정치적인’ 힘

이 없는 그룹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 정부조직개편과정, 정부 및 청와대 인사과정, 총선 후보 및 비례대표 추천과정에서 ‘빠져리 게’ 느끼지 않았는가.

‘소통’ 통하여 ‘정치적인’ 힘 키우자

교육과학기술부 2008 대통령 업무보고에 의하면 새 정부는 ‘교육 살리기,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통한 ‘선진일류국가를 건설’을 정책비전과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보고에서 새 정부는 국가 R&D 투자를 GDP대비 2006년 3.23%에서 2012년 5% 수준으로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이미 올해는 10조8천억 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앞으로 2012년에는 현재의 1.5배인 16조2천억 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특히 대학에 대한 비중을 크게 확대하며, 기초원천 연구비의 비중은 현재 25%인 2조8천억 원으로부터 2012년에 50%인 8조천억 원으로 크게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개인·소규모연구 지원도 올해 3천700억 원에서 2012년에는 1조5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한다. 출연연구기관의 PBS시스템을 개선하며 과학기술인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등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높여 과학기술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보고했다.

대부분의 과학기술인들은 과학기술의 발전도 결국 재정적 투자가 관건이기 때문에, 국정과제 실행계획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꼭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우리는 과학기술 정책들이 경제학자들이나 경제 관료들의 힘과 논리에 밀려 원래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거나 중간에 흐지부지된 사례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일부 우려를 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정부가 ‘과학기술강국’ 정책의 원래 취지를 끝까지 살리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계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다. ‘소통’을 통하여 ‘정치적인’ 힘을 키우는 일이다. 과학기술인들도 이제는 선의의 ‘투쟁’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발전을 위한 일이다. 첫째, 과학기술계는 인문, 사회계 및 일반 국민들에게 ‘과학기술’ 그리고 ‘과학기술시대’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시켜야 한다.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과학계와 비과학계 사이의 인식의 차이는 매우 큰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하는 언어와 논리를 상대방의 관점에서 새롭게 개발해야 한다. 둘째, 과학기술계 내부의 결속을 다지며, ‘정치적인’ 힘을 모아야 한다. 상황에 따라 순발력 있게 논리를 가

지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계는 내부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외부적인 네트워크를 폭 넓게 확대하며 유대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자

우리 나라가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세계 수준의 과학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국정운영의 중심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새 정부가 약속한 ‘과학기술강국’ 정책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여야 한다. 선진국처럼 대통령이 앞장서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기회 있을 때마다 역설해야 한다. 지난 2월 25일 과실연이 공개적으로 요청했던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과학기술인들과 우리 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청와대에 과학기술특별보좌관 겸 국가CIO를 신설해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이 기반이 되는 정책이 과학적인 사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바로 서야 한다. 정부의 과학기술 투자 및 과학기술 예산의 합리적 배분, 과학적인 정책 운영, 문·이과 구분 없는 교육, 수학·과학 교육의 개선 등이 강조되어야 한다. 학술진흥재단과 과학재단의 통합, 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 한반도대운하 등 현안 문제로부터 장기적인 정책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과학기술인들이 단순한 정책자문 위치에서 정부 정책의 파트너로서, 전문가로서 정부 정책의 주도그룹의 위치에 서야 한다. 이는 새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 과실연을 비롯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등 주요 기관 및 단체들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연석회의를 제안한다. ㉔



글쓴이는 연세대학교 수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캐나다 칼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퍼지 및 지능시스템학회 회장, 대한수학회 회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으며,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 위원장 등을 겸임하고 있다.